

제1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결과보고(요약)

2026. 3. 18.(수), 농어업정책팀

□ 추진 개요

- 때 · 곳 : '26. 3. 16.(월), 10:00~12:00 / 위원회 대회의실
- 참석자 : 9명(TF 위원 5, 위원회 4)
- 내용 :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중점추진과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농업인 기준 재정립 관련 논의 등

□ 주요 내용

1. 중점추진과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

-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의제를 분과위원회 구조(농업·농어촌·농수산식품)와 연계하여 발굴하고 우선 추진과제를 제안
 - 분과위원별 사전 자문회의 결과 및 국정과제와의 연관성, K-농정 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7개 축으로 정리

최종보고 주요 내용

- ▶ 농정 환경 변화와 위원회의 역할 : 농정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책 논의 플랫폼
- ▶ 분과위원회별 주요 정책 의제 및 중점 추진과제 발굴(7개 축)
 - 기후위기 대응, 식량주권, 농지 정책, 농업인 정책, 농산물 유통, 농촌 정책, 재생에너지

2. 농업인 기준 재정립 논의

- 직불금에서부터 비과세 혜택까지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온전히 실제 농업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**공론화 방안** 마련

발제자료 주요 내용

- ▶ 쟁점 : ¹복잡·다양한 농업 구조로 인한 일률적인 농업인 정의 한계, ²정책 이해관계자별 충돌 우려, ³실제 영농 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·행정적 한계
- ▶ 개편 : 농업인의 기본 자격과 정책대상 자격을 분리하여 인식접근하되,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
 - ※ 농업인 자격을 3층 구조로 구분 : 기본농업인, 직업농업인, 미래농업인

- 범위 기준 : 기본 자격과 정책 대상 자격의 분리 검토
 - 농업인 정의 강화 시 신규 진입 장벽 상승으로 인한 농업 인구 감소로 미래 농업 구조 약화 우려, 현행 유지 시 가짜 농업인 구분 불가
 - ☞ 실제로 농업인의 정의는 폭넓게 가고, 정책별로 실제 대상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
- 농업인 자격 : 3층 구조로 구분 검토
 - 기본농업인(법률상 농업인) / 직업농업인(전업농, 재정지원과 대표성의 핵심) / 미래농업인(진입 초기 농업인, 예비농업인)
- 선행조건 : 사회적 합의 필요
 - 농업인 구분의 세 가지 축(기본농업인, 직업농업인, 미래농업인)을 기준으로 정책수혜자(농업인) 중심의 합의 과정 및 공론화 필요
- 필요조건 : 소득정보 구축 방안 마련
 - 맞춤형 농업정책 및 복지지원, 농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소득정보는 필수 요건이나, 사업자등록 없이는 농업인 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 부재

□ 차기 회의 계획

- 제2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: '26.4.7.(화), 10:00 / 위원회 대회의실
 - 농업인 정의 선행 연구 시사점 및 해외 사례 정리 등 관련 논의